

제2차 한-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약체 회의 출장결과

2022. 10.



국민권익위원회

I 출장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외교부 측에서 미국(워싱턴DC)에서 10.13.~14. 개최 예정인 ‘한-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’ 제2차 회의에 반부패·시민협력 의제 논의를 위해 한국측 대표단에 권익위 실무급 참석을 요청
- 회의 안건에 인권·성평등·반부패·시민협력 등이 포함됨에 따라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및 시민협력 등 성과를 공유

< 한-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요 >

- '21.5월 한미 양국은 양국간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노력 조율을 위해 '한-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' 출범에 합의
 - '21.10월 외교부 인권사회과장,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 동아태과장을 수석대표로 여가부와 법무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해 주요 의제* 논의
- * 국제 인권·민주주의 증진 협력, 국내 인권 상황(인종차별, 선거 투명성, 반부패, 성평등,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), 시민사회 협력

□ 출장자 및 출장 일정

- (출장자) 민간협력담당관실 박정희 사무관
 - 수행 업무 : 한-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2차 회의 참석 및 반부패 의제 발제 및 토의, 공무국외출장 준비 및 후속조치
- (일 정) 2022. 10. 12. ~ 10. 15.(2박 4일)
- (출장지) 미국 워싱턴D.C.

□ **출장 세부일정**

일자	출발지 도착지	방문지	내 용	접촉 예정 인물
10.12(수)	인천 워싱턴DC		▶ 인천 출발(10:00) * 비행시간 14h 00m ▶ 워싱턴DC 도착(11:00)	
10.13(목)	-	미국 국무부	▶ 한-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- 08:30. 개회(한국 외교부, 미국 국무부 개회사) - 09:00. 세션1. 국제 측면의 인권과 민주주의 - 12:00. 점심식사 - 13:30. 세션2. 국내 측면의 인권과 민주주의 - 16:40. 폐회	미 국무부
10.14(금)	워싱턴DC	미국 국무부	▶ 한-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- 09:00. 국제 측면의 인권과 민주주의 후속 ▶ 워싱턴DC 출발(13:00) * 비행시간 15h 50m	미 국무부
10.15(토)	인천		▶ 인천 도착(17:50)	

※ 한국측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외 권익위, 법무부, 경찰청, 한국국제협력단 참석

II 회의 결과

1. 주요 논의결과

□ 개회사

- (미측) 국무부 민주주의·인권·노동국 부차관보
- (우리측) 외교부 국제기구국장

□ 반부패 의제 논의

- (한국) 우리나라는 부패 예방을 위해 공직자에 대한 행위규범 강화, 부패 유발 요인 개선, 민-관 반부패 거버넌스 활성화 등 강력한 반부패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
 - (행위규범)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,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청탁금지법('16.시행), 이해충돌방지법('22.시행) 등 반부패 법령을 강화하였음
 - (제도개선) 부패영향평가*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법령, 규정, 제도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함
 - (시민참여) 시민사회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시각에서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자 민-관 반부패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를 활성화
- (미국) 바이든 대통령은 범정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반부패 계획을 수립하고, 반부패 특별대사를 임명하는 등 반부패에 집중하였고, 국무부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상호 연계하고 있음
 - 반부패는 국제협력이 중요하므로 한국 측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
 - 한국의 반부패 특별대사 주재 '국제반부패협력회의'(워싱턴, 12.6~!0경) 참여 및 반부패 성과를 공유 등 요청

- (한국) 한국은 유엔개발계획(UNDP) 협력사업을 통한 개도국 기술지원, '20년 국제투명성회의 개최 등 반부패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 중
 - (기술지원) 2015년부터 유엔개발계획(UNDP)과 MOU를 체결하고,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·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, 올해 반부패 관련 디지털 시스템인 '청렴포털' 전수에 착수
 - (국제회의) '20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와 국제반부패회의(IACC)를 개최, 한국의 반부패 성과 공유 및 반부패 전문가 토론 등 진행
 - 향후 협력방안은 외교부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요청
- ⇒ 국제반부패협력회의(워싱턴, 12.6~10경 개최)의 구체적 계획 확정 시 참석 여부 및 논의 주제 등 검토 필요

2. 반부패 의제 발제문

-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의 부패방지 관련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한편,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심판과 민원 처리 업무도 추진 중인 행정기관입니다. 권익위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들과 최근성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
- **(총론)** 먼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올해 5월 대통령이 바뀌었으나,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.
 - 최근 반부패 정책의 주요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하면, 공직자에 대한 행위규범 강화,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요인 개선, 반부패 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참여가 특징적입니다.
- **(① 행위규범)** 우선 공직자 행위규범 강화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 부정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습니다.

- 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, 공직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 및 향응 등 비정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, 직무와 관련한 비공식이고 부정한 청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*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

- 과거 한국의 부패의 주요 요인으로 연고주의가 많이 지적되었으며, 부패 해소를 위해 공직자에 대한 접대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.
- 이 법은 제정 초기에는 큰 반대가 있었습시다만, 시행 6년이 되는 현재로서는 공직자와 일반 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

-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하여 올해 시행되었으며,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

*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RELATED TO DUTIES OF PUBLIC SERVANTS

- 2018년부터 대통령령인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을 통해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었으나, 작년 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대형 부패 스캔들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법률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.
- 한국 사회는 공직자들이 직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였고, 그 결과 직무상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신고하거나, 채용 및 계약 과정 등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면 직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.

- (② 제도개선) 다음으로,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제도 개선의 방법 중 하나로 ‘부패영향평가’ 제도가 있습니다. 한국에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 모두가 평가 대상이며, 법령 제정 과정에서 부패를 발생시킬 만한 제도적 결함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.

- 2006년 제도 도입 후 2020년까지는 중앙부처 소관의 약 2만개의 제·개정된 법령을 평가하였고, 2,400여개의 부패요인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해당 부처에 권고하였습니다.
-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450여개 공기업의 사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인사, 계약, 내부 부패통제 장치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.
-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26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인허가 과정의 과도한 규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- 이외에도 부패 발생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기관에 권고하는 직접적인 형태의 제도개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**(③ 시민참여)** 마지막으로 반부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의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 - 한국 정부는 효과적인 부패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반부패 정책에서 더 나아가 사회 각계의 자발적이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, 대표적 정책이 ‘청렴사회민관협의회’입니다.
 - * the public-private consultativ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
 -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경제단체, 직능단체, 시민사회단체, 언론협회, 학계, 정부기관 등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단체의 대표자 40인으로 구성하여 2018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.
 - 협의회는 경제·사회·교육·지방자치·공공정책 등 5개 분야의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, 제안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되어 정책 개선에 참고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지자체·공기업·기업 등이 자유롭게 **청렴사회협약**을 체결하고 반부패 및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한국의 17개 광역지자체 각각이 중심이 되어 지역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, 방위산업·회계·윤리경영 등 9개 분야 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적으로 840개 기관이 참여 중입니다.
- **(추가, 국제협력)** 한국 정부는 반부패 문화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전파하고 있습니다.
 - 2015년 UNDP와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, 현재까지 개발도상국 10개국에 부패영향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(Anti-corruption Initiative Assessment) 등 **반부패 기술 지원사업**을 실시하였으며, 반부패기구 직원 대상 **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도** 실시하고 있습니다.
 - 또한, 2020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와 함께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(International Anti-Corruption Conference, IACC)를 개최하였으며, 국제기구, 기업, 학계 등 각 분야의 반부패 리더와 1만 여명의 일반 참가자 참여하여 반부패 현황 및 대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.

Ⅲ 향후 계획

- **국제 협력 지속 추진**
 - 한-미 협력방향 및 권익위 역할 관련 외교부와 수시 협의
 - 필요 시 국제반부패협력회의(12월),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(23 예정) 등에서 반부패 문제 관련 협력 모색

	외교부	보도자료	<i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i>
	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
배포일시	22.10.14.(금)	담당부서	국제기구국
담당자	이철 국제기구국 협력관 (02-2100-7224)		

제2차 한-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최

1. 한-미 양국은 10.13.(목) 미국 워싱턴에서 「제2차 한-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」 회의를 개최하였다.
 - 동 협의체는 양국이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출범에 합의한 메커니즘으로, 작년 10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.
 - ※ 우리측 강주연 국제기구국장, 미측 Scott Busby 국무부 민주주의·인권·노동국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
 - 우리측에서는 외교부, 법무부, 경찰청, KOICA, 권익위가 참석하였으며, 미국측에서는 백악관, 국무부, 법무부, 국토안보부, 국방부, FBI, USAID가 참석
2. 이번 회의에서 한-미 양국은 △글로벌 차원의 인권·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△양국의 국내 차원의 인권·민주주의 증진 노력 등을 공유하였다.
3. 한-미 양국은 다양한 부처와 각급에서 참여한 금번 회의가 국내외에서 인권·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양국의 정책방향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. 끝.